"저소득 청년 생계비 300만원 지원"

정부, 만 34세 이하 · 고졸 이하 저소득층 5000명 대상… 유관기관 전문가 추천 후 자격심사

정부가 취업 취약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17년 제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의결, 발표했다.

정부는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생계자금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취업 취약 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고졸 이하의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이다. 청년가장 혹은 1인 청년가구가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거쳐 청년희망재단이 꾸린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최대 5000명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청년희망재단에서 지불한다.

이번 정책은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청년수당과 유사한 면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자가 제출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 중이다.

성남시 역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2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청년배당'을 지급 중이다.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을 발행, 지급하고 있다.

요트와 보트 '한곳에' 2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7 부산국제보트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각종 요트와 보트를 구경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정책이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자체들의 청년 수당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 청년수당과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생계자금 지원 정책은) 상호의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며 "구직활동과 확실히 연계가 돼야 하기에 활동계획서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을 받게되면 1년 가까이 상담과 훈련을 진행하고 구직활동에 들어가는데, 상담사가 참가자의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해 재단에 추천을 하면 지원 여부가 가려진다"고 부연했다.

월 혹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지자체 청년 관련 수당과는 달리 지원금이 한 번에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한편, 지자체 청년 관련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지자체에서 수당을 받으면 우선 순위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수당을 받았더라도, 고용상담센터 상담사들이 봤을 때 여전히 상황이 열악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심사에서 배제를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정책은 청년희망재단이 준비에 착수했고, 이르면 내달 중 추천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이자 일부 갚으면 연체이자 부과 안돼"

만기 일시상환 경우… 이자 납입일에 낸 이자 해당 기간만큼 최종납입일 연장

은행에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린 후 자금이 부족해 대출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없다면 일부라도 우선 갚아야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일부만 지급해도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실용금융정보를 23일 안내했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 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정상이자에 6.0~8.0%p 추가)를 부과한다.

상환 여력이 부족하다면 이자 납입일에 일부만 갚는 게 도움이 된다. 낸 이자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4% 금리로 2000만원을 빌린 사례를 가정해보자. 1일치 이자는 2191원인데 만약 5000원을 입금하면 2일치 이자를 낸 셈이어서 이로 인해 납입일이 2일 연장되는 식이다.

다만 이러한 이자 일부 우선 납입은 만기 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마이너스통장, 분할상환대출 등은 제외된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금리 감면도 가능하다.

은행들은 대출 약정시 해당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다. 통상 전월 신용·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이용, 자동이체 2건 이상 출금, 급여이체, 가맹점대금 입금 등이 해당된다.

대출이용 기간 중 소득 등이 오르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된다.

만기일 연장 제도도 있다.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요구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 만기일을 연장한다. 이 때 소비자가 다른 상품으로 계약변경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상품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대출상품의 금리 등 기본적인 거래조건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금융상품한눈에' 코너에서 비교할 수 있다. /뉴시스

파나소닉, '루믹스 GH5' 출시

4K 60프레임 동영상 촬영 지원 미러리스 카메라

파나소닉이 국내 시장에 4K 60P(프레임)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는 미러리스 카메라 '루믹스 DC-GH5'를 출시했다.

파나소닉코리아는 22일 서울 노보텔엠베서더에서 신상품 발표회를 개최하고, 루믹스 GH시리즈의 최신작인 GH5를 선보였다. GH 시리즈는 파나소닉 미러리스 카메라 중 동영상 기능이 특화된 플래그십 모델이다.

노운하 파나소닉코리아 사장은 이날 "파나소닉은 4K 기술력을 앞세워 국내 IT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모델 출시로 국내에서 미러리스 대중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루믹스 GH5는 영화·방송 촬영을 주로 하는 전문 영상 제작자와 고화질의 사진 및 동영상을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유저에게 적합한 방송 장비급 미러리스 카메라다.

루믹스 GH5는 미러리스 세계 최초로 화각 크롭 없이 센서 전체를 사용하는 4K 60P(3840X2160, 60p) 동영상 촬영과 4:2:2 10비트 내장 녹화를 지원한다. 이에 초고화질 해상도의 콘텐츠를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초당 30 프레임의 6K 사진 기능을 지원, 1800만 화소의 6K(5184X3456)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4K 사진은 이전 모델 대비 2배 빠른 초당 60프레임으로 향상됐다.

루믹스 GH5는 로우 패스 필터를 제거한 총 2177만 화소(유효 화소 2030만 화소)의 디지털 라이브 MOS센서와 새로운 비너스 엔진을 탑재했다. 이전 모델 대비 1.3배 향상된 신형 비너스 엔진 장착으로 1/8000초의 셔터 스피드와 6K 촬영 시 약 30매, 4K 촬영 시 약 60매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

특히 파나소닉이 개발한 본체와 렌즈의 손떨림 보정 기능 '5축 듀얼 I.S.2'가 들어가 호환 렌즈를 탑재할 경우 한 손으로 촬영해도 흔들림이 제어된다.

마그네슘 합금 카메라 바디와 방수, 방진 설계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촬영 가능하다. 모든 다이얼과 버튼은 실링 처리 마감으로 비, 눈 등의 내부 침투를 차단해 영하 10도 환경에서도 촬영 가능하다.

저장 매체는 SD, SDHC, SDXC(UHS-I/UHS-II) 메모리 카드를 지원하고, 듀얼 SD 메모리 카드 슬롯을 탑재해 용도에 따른 선택 저장이 가능하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완충 시 약 400매 가량의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 색상은 블랙 단일 색상이며, 바디 가격은 249만원이다. /뉴시스

시간당 임금 1만3753원… 6년 만 감소

전년(2014년) 1만4587원 보다 5.7% 834원 감소

2015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6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3753원으로 전년(1만4587원)보다 5.7%(834원)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은 2008년 1만996원에서 2009년 1만591원으로 꺾인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6년 만에 다시 감소한 것이다. ▲2010년 1만1155원 ▲2011년 1만1916원 ▲2012년 1만3145원 ▲2013년 1만4075원 ▲2014년 1만4587원의 추이를 나타냈다.

성별로 보면 남자 1만5766원, 여자 1만727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9%(988원), 5.4%(612원) 감소했다.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의 68% 수준이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의 시간당 임금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중졸 이하는 85.1%, 전문대졸 117.6%, 대졸 160.5%, 대학원졸은 262.7%다.

2016년 전체 취업자는 2623만5000명으로 전년(2593만6000명)보다 29만9000명이 늘어 1.2% 증가했다. 청년층(15~29세) 4만8000명, 50대 9만2000명, 60세 이상에서 22만3000명이 증가했고 인구가 감소 중인 30대와 40대는 각각 3만6000명, 2만9000명 감소했다.

임금근로자가 1955만명으로 전체의 74.5%를 차지한다. 이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66.4%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1만7000명 감소한 669만명으로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뉴시스